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65.10	↑ 코스닥	710.82
	(+5.57)		(+1.05)
↓ 금리 (미국 9년)	3.466	↓ 환율 (원-달러)	1245.80
	(-0.006)		(-0.40)

[경제종합]  
정의선  
세계 후산업  
영향력 '1위'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일인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쇼핑관광축제이다. /뉴스시스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일인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쇼핑관광축제이다. /뉴스시스

## D램 값 끝없는 추락 DDR5 보급이 관건

업계, 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1분기 D램 적자 기정 사실화

인텔, 4세대 서버 CPU 출시  
속도 2배, 소비전력 10% 절감  
보급 본격화로 가격 반등 기대

D램 가격이 결국 1달러대로 주저앉고 있다. 앞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 DDR5 보급 속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8Gb 2666MHz D램 기준 현물 평균 가격은 10일 이후 1.9달러대로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한두달 안에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1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업계에서는 D램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한 상태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최대 18%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난달 고정 거래 가격은 2.21달러, 이미 현물 가격은 이같은 하락 전망을 충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도 가격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

행은 올해 반도체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1.5%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는 1분기 D램 적자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반도체 업체가 적자를 확정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에서는 삼성전자조차 4분기 적자가 유력시된다.

이번에도 희망은 새로운 규격 DDR5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다운사이클에서도 각각 차세대 제품인 DDR3와 DDR4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반등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리거'는 인텔 서버용 CPU 출시였다. 2012년 5월, 2016년 7월에 인텔이 새로운 D램 규격을 지원하는 제논을 내놓은 직후부터 D램 가격은 하락을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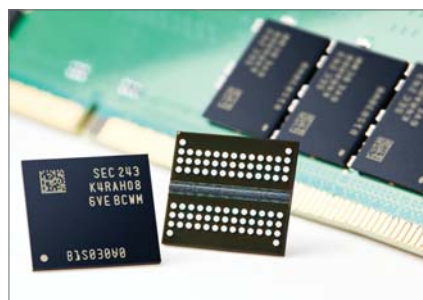
인텔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서버용 CPU 주력 제품인 4세대 제논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했다. 이미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공급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버용 CPU 출시는 여느때보다 시장 과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옴디아에 따르면 서버용 D램 매출 비중이 34.4%로 모바일(30.5%)을 앞지른 상황, 데이터 센터 업계 성장과 대기 수요 등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새로운 규격은 성능 뿐 아니라 전력 효율을 크게 제고한 만큼,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개발한 12나노급 D램.

### M-커버스토리

## '방탄'·'北드론' 대처로 멈춘 임시국회

길 잃은 민생법안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 등  
'일몰법' 개정안 처리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어서 숨통이 다소 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 화물차 안전운임제 ▲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의이 재적 299인, 재석 215인,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팔면 1주택자 간주

시장 침체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취득·증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날부터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뒤 2주택자가 됐지만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 의사가 분명하지



만 2년 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앞으로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증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증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증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국정수행 '긍정' 3%p 상승한 37%... 부정평가 2%p ↓ /사진 뉴스시스  
▲인권이,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결론 지연

▲김기현 "수도권 당 대표론은 전국 정당에 지방색, 매우 부적절"  
▲외교부, 日 기업 대신 재단 통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내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유효...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뀌어"  
▲심상정 "중대선거구제, 양당담합 가능성... 다당제 가야" /사진 뉴스시스